치매관리주치의 사업, 전남은 담당의사 없어 '그림의 떡'

순천·함평·광주 서구, 신청 의사 수 적고 교육 이수자 없어 탈락
고령화·치매 유병률 전국 최고인데… 지자체는 탈락 사실도 몰라
해남·신안 등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도 의사 없어 반납 위기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정부의 '치매관리주치의 사업' 시범 사업에 응모했다가 탈락했다.

광주·전남이 고령화로 치매를 비롯한 의료 수요가 해마다 높아지는 데도, 정부 지원사업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와 치매 유병률에도, 심각한 의료 인프라 격차가 지역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22개 시·군·구에서 운영하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올해 전국 37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지역은 15곳으로, 애초 시범 사업 대상지에 이름을 올렸던 광주 서구와 순천·함평은 최종 탈락했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던 의료진들이 받아야 할 필수 교육에 불참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들이 전문의의 포괄평가와 건강관리, 방문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 서구, 순천시, 함평군의 경우 지역 의사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2차 시범사업 대상지로 꼽혔지만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던 필수 교육을 단 한명도 이수하지 않으면서 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졌다.

애초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사 수 자체가 턱없이 적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월 공모 중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사들은 순천시 6명, 함평군 1명, 광주시 서구 1명 뿐이었다.

앞서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1차로 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될 당시 광주시 북구(의사 7명), 목포시(16명), 영암군(4명) 등 지원자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전남 지역 핵심 현안인 치매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도 한몫을 했다.

광주시 서구, 순천시, 함평군은 이날 2차 사업 대상지 탈락 사실·사유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고 구에 통보하는 형태라 지자체에서 알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전남 전체 등록 치매환자는 5만 73명(지난 3월 기준)으로, 이 중 65세 이상 등록 환자가 4만 9478명으로 전체의 98.8%를 차지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도 지난해 12월 기준 10.26%로, 전국 평균(9.15%)보다 1.11%p 높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다.

순천시가 등록 치매환자 수 5085명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고, 뒤이어 여수시(4617명), 목포시(445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함평군의 경우 등록 치매환자 수 1327명 중 65세 이상이 1322명으로, 전체 고령 치매환자 비율이 거의 100%에 달했다. 이런데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해당 사업 참여가 무산되면서 전남도와 지자체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전남 지역 보건소의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업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신안, 영암, 진도, 해남 등 전남 지역 4곳에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 1차를 모두 마감했지만 진도를 제외한 3곳에서는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에 사업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남군 보건소는 21일까지 1차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22일부터 일주일 간 재공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접수를 마감한 영암은 오는 28일까지, 신안은 31일까지 2차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진도 보건소는 22일 시니어 의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23일 합격자 발표를 할 계획이다.

해남군 보건소 관계자는 "공고 채용을 올린 것 외에도 알음알음 수소문하고 있지만, 구하기 쉽지 않다"며 "이대로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 지원금을 반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편 정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 오는 9월 중 다시 의사 교육 일정을 잡아 시범사업에 재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소비쿠폰 매매 불법입니다
발행 하루만에 되팔이 기승

당근마켓 매매 글 잇따라
적발땐 2000만원 이하 벌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한 지 하루 만에 상품권을 중고 매장에 되파는가 하면, 광고성 낚시글을 올리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끼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22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광주시 북구 신안동에서 '소비쿠폰 18만 금액권 88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18만원 짜리 소비쿠폰을 88% 수준의 금액인 15만 8400원에 중고 판매한다는 내용이다. 소비쿠폰을 되팔아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 방식의 부정 유통 행위다.

게시글에는 '유흥, 백화점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챗(채팅) 주시면 설명드릴게요'라고 적혔다. 이 글이 게시된 지 3시간여만에 4명이 구매 의사가 있다며 채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거래를 하자며 직거래를 하자는 거래 게시글도 잇따랐다. 지난 21일에는 북구 용봉동 용봉성당 앞, 두암동 광주병원 앞, 광천동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 등지에서 18만원짜리 소비쿠폰을 15~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문자를 금칙어로 설정해 거래를 막고 있으나, 실상은 '민생소비 회복쿠폰' 처럼 글자 순서를 바꾸는 등 '꼼수'를 써 가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소비쿠폰의 양도 및 현금화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제재부가금 및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쿠폰 제도를 이용하는 정체불명의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 동구 등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털에서 관련 안내를 받으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해당 글에 첨부된 링크는 인터넷 광고를 다수 포함한 채 소비쿠폰 제도 설명을 늘어놓는 사이트로 연결됐다.

경찰은 소비쿠폰 제도를 알려주겠다며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메시지, 게시글 등에 포함된 도메인 링크를 절대로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한 가짜 신청 사이트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 은행, 카드사 등의 공식문자 메시지에는 도메인이 일절 포함되지 않으므로 도메인 포함된 메시지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공무원을 사칭해 소비 쿠폰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에도 모두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관세폭탄·방위비 인상, 당당하게 대처하라 광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2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의원직 유지

항소심 벌금 90만원 원심대로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고 요구해 이른바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도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선출된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잃는다. 신 의원은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광산경찰 삼거소각장 '위장 전입' 의혹 압수수색

경찰이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 일어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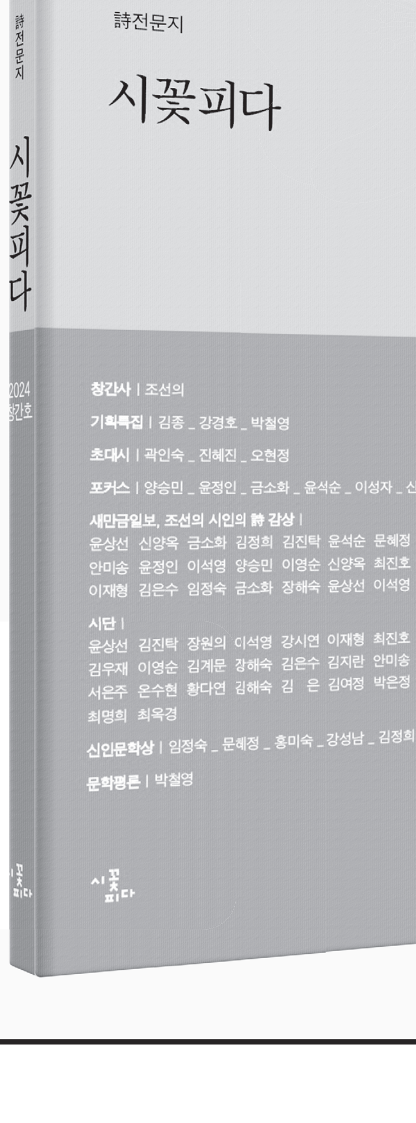
경찰은 지난 5월 광주시가 광산구 삼도동을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민들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